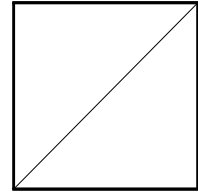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91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5. 31. (제11차)

의
결
사
항

(주)밸류시스템자산운용 등 7개 대상자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3. 5. 31.

1. 의결주문

- ☐ (주)밸류시스템자산운용 등 7개 대상자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2022. 12. 15.부터 밸류시스템자산운용 등 7개 대상자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보고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견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혐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 과태료 부과(3,600만원) : (주)밸류시스템자산운용 [국내기관(자산운용)]
 - 과태료 부과(5,700만원) : 신한투자증권(주) [국내기관(증권)]
 - 과태료 부과(4,800만원) : 삼성헤지자산운용(주) [국내기관(자산운용)]
 - 과태료 부과(10,800만원) : 링크자산운용(주) [국내기관(자산운용)]
 - 과태료 부과(600만원) : 비욘드자산운용(주) [국내기관(자산운용)]
 - 과태료 부과(18,520만원) : 최기윤 [개 인]
 - 과태료 부과(900만원) : 문형식 [개 인]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 붙임 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 제39호의2, 제39호의4, 제180조의2, 제180조의3

(별지 1)

(주)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밸류시스템자산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항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사실에 대해 동법 제449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에 의하여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주)밸류시스템자산운용 [국내기관(자산운용)]

- 주 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112길 60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7.13.~2019.6.26. 기간 중 총 4일에 걸쳐 3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1~3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별지 2)

신한투자증권(주)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한투자증권(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항 및 제180조의3 제1항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위반 사실에 대해 동법 제449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에 의하여 과태료 5,700 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신한투자증권(주) [국내기관(증권)]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위반

- 신한투자증권은 2018.7.5.~2022.6.24. 기간 중 총 5일에 걸쳐 9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1~2일 지연보고하였으며,
- 이 중, 2020.8.18. 1개 종목을 보고기한 익일 공시한 사실이 있음

(별지 3)

삼성헤지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헤지자산운용(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항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사실에 대해 동법 제449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에 의하여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삼성헤지자산운용(주) [국내기관(자산운용)]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7층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 삼성헤지자산운용은 2018.7.11.~2018.10.10. 기간 중 총 3일에 걸쳐 66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4~150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별지 4)

링크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링크자산운용(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항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사실에 대해 동법 제449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에 의하여 과태료 10,8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링크자산운용(주) [국내기관(자산운용)]

-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15층 링크자산운용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 링크자산운용은 2018.7.12.~2019.6.17. 기간 중 총 23일에 걸쳐 4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익일 내지 2주 가량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별지 5)

비온드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비온드자산운용(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항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사실에 대해 동법 제449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에 의하여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비온드자산운용(주) [국내기관(자산운용)]

- 주 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1407호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 비온드자산운용(舊유리치자산운용)은 2018.7.31. 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익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별지 6)

최기윤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기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항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사실에 대해 동법 제449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에 의하여 과태료 18,52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최기윤

- 주 소 : 대구시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 2018.7.27.~2020.2.20. 기간 중 총 77일에 걸쳐 3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1~7일 가량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별지 7)

문형식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문형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항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사실에 대해 동법 제449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에 의하여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문형식

- 주 소 : 서울시 ***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 2018.7.31.~2019.8.27. 기간 중 총 5일에 걸쳐 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1일~2주 가량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이하 이 장에서 "순보유잔고"라 한다)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매도자의 구체적인 범위, 순보유잔고의 산출방법, 순보유잔고의 비율 등 보고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보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4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⑥ 생략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② 생략

③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순보유잔고(이하 "순보유잔고"라 한다)는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보유총잔고: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매도자(이하 이 조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누구의 명의이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증권에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량

나.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 중인 증권에의 수량

다.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에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권에의 수량

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받을 증권에의 수량

2. 차입총잔고: 매도자가 기준시점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에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기준시점 전에 차입하고 기준시점에 해당 차입증권을 상환하지 아니한 증권에의 수량

나.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에의 수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자는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에의 종목별 **발행총수(기준시점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량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하 "순보유잔고 비율"이라 한다)**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만분의 1 이상인 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⑤ 그 밖에 순보유잔고 보고의 시기,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 10. 17.>

<별표 22> 과태료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즈. 법인이자 법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또는 법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6,000
츠.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또는 법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3,000

□ 금융투자업 규정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① 이 조에서 “공매도”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영 제208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

④ 영 제20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다. 후략. <개정 2016.6.28.>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영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6.28.>

② <삭제 2016.6.28.>

③ 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6-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 2~3. 생략

부 칙 <제2020-4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가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

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21.4.6.>

※ 법 제449조제1항제39호의2부터 제39호의5까지 및 제3항제8호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로서 주체·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일자 등이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행위를 구별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3)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나. 다만,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과태료 부과비율 기준

결과	동기	상	중	하
	결과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90%	기준금액의 75%
보통	기준금액의 90%	기준금액의 75%	기준금액의 50%
경미	기준금액의 75%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위법행위의 동기

- a. 상 :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법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 b. 중 :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법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닌 계속·반복적 위법행위 등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c.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만,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법행위의 결과 <개정 2021.4.6.>

- a. 중대 : 위법행위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 b. 보통 : 기타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c. 경미 : 위법행위로 인하여 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개정 2021.5.12.>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차감한 비율을 예정금액에 적용하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사유

- (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법 제449조제1항제35호의4부터 제35호의8까지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 및 법 제449조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는 1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삭제 2021.4.6.>

나. 감경사유

- (3) 보고·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해 투자자가 보고·공시의무 대상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보고·공시기한 이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등 <개정 2021.5.12.>

가. 위반자의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 (4)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효가 없는 경우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규제 위반행위 및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28., 2010. 11. 12., 2014. 9. 1., 2017. 10. 1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

1. 삭제 <2017. 10. 19.>

2.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1)(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만한다), (2) 또는 마목의 (2), (4) <개정 2017. 10. 19.>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개정 2001.2.28, 2005.12.15, 2013.12.20, 2016.3.22, 2016.7.25, 2017.10.19>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개정 2017.10.19>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7.10.19>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0>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3.12.20>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전문개정 2017.10.19]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2017.10.19>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017.10.19>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7.10.19>

(3) 삭 제 <2017.10.19>

(4) 삭 제 <2017.10.19>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19>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19>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5.13.>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7.10.19>
-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7.10.19>
- (8) 삭 제 <2017.10.19>
-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7.25>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개정 2017.10.19>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3.12.20, 2017.10.19>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신설 2017.10.19>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17.10.19>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7.10.19>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감독국
연 락 처	02-2100-2605	02-3145-7607